

#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방소멸·국가멸종 촉진”

### 이명연 도의원, “수도권 초집중화, 저출생 문제의 중심… 해법은 균형발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3일 열리는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명연 도의원

이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소멸과 국가 멸종을 촉진하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지적은 과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방소멸과 국가 멸종의 뇌관이라 할 저출산 문제의 중심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초래한 수도권 초집중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수도권 쏠림과 집중화를 더욱 심화시켜 저출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게 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 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 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이윤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만 살찌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과 국가 멸종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은 균형발전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부추겨 지방소멸과 국가 멸종을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당장 철회하고,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지방소멸과 국가멸종 촉진하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지난 8월 8일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수도권 초집중화를 심화시켜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 여러 정부가 시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인구 증가, 지방 인구 이탈, 수도권의 교통·주택난 심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교통망과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 또 다시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라면서,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바로 이런 정책 실패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가적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라고 개탄했다.



“딤페이크 사태 키운 건尹 정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딤페이크 관련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정부, 쌀값 대폭락 대국민 사과하라”

### 임승식 도의원,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값 대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국가 차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승식 도의원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공비축 시행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쌀 의무수입, 쌀값 폭락 주범”

### 전북자치도의회, 박용근 의원 발의 건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군 선거구)이 발의한 ‘쌀값 폭락 부추기는 쌀 의무수입 중단 건의안’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박용근 도의원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 10개월째 산지 쌀값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지금 사태를 불러온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 “관광객 체류시간·소비 증대 대책 마련해야”

#### 김희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더불어민주당)은 3일 제4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관광객 체류시간과 소비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서 도민의 관심을 끌었다.

김 의원은 “2023년 전북자치도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190만 명이 증가했지만, 방문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600분 감소하고 관광소비액 또한 648억 원이 감소하였다.”라면서, “이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이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거나 소비를 촉진하는데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번 5분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전북의 핵심 관광산업인 전북투어패스 판매 내역을 보면 2023년도 전체 판매내역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한옥마을권은 61%가 감소하면서 방문객이 이제는 한옥마을을 단 방문지로 인식하거나 전북투어패스 한옥마을권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타 시도와의 무한경쟁 속에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전북자치도의 관광산업은 체류형 관광의 체질개선은 고사하고 지역 관광산업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방문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 증가 그리고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전문문화와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객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면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역축제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서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전북자치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 “소상공인 디지털 기술 지원·골목상권 활성화 캠페인 제안”

#### 김이재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원(전주4·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4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내 소상공인은 오랫동안 3고(고물가, 고금리, 고회율) 현상과 소비심리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이용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나, 준비 정도는 미흡하고 관련 지원 정책도 없는 상황”이며,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북적거리야 할 전통시장은 위축된 소비심리로 손님도 없이 한산한 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버텨내온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불필요 특별회계·기금 정리해 전북자치도 공간 확보”

#### 김성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더불어민주당)이 3일 열린 제41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전북자치도 살림에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2년 결산검사 시 농어촌주택사업 총 세출결산액의 70%가 예비비로 계상돼 있음”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2023년 결산서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 결산액 중 57.5%에 해당하는 50억여원이 통합관리기금에 예비비로 명칭만 바꿔 계상함으로써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버텨내온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버텨내온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버텨내온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어려움을 버텨내온 소상공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효과성 있는 정책들이 도정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 전주 노인회 운영위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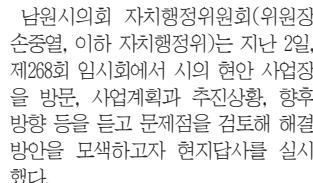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이 2일, 대한노인회 전주지회(이하 전주노인회) 신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025년 9월 2일까지로 전주노인회 운영위원회는 전영배 지회장을 비롯해서 총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전주시는 총인구는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연국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정책 중요성의 증가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면서, “전주시 노인회 운영위원으로서 전주노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위촉 소감을 밝혔다.

###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 현장의정활동 나서

#### 복합형 공공도서관·다목적 드론활용 센터부지 등 방문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손종열, 이하 자치행정위)는 지난 2일, 제268회 임시회에서 시의 현안 사업장을 방문,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향후 방향 등을 듣고 문제점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방문 현장은 복합형 공공도서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다목적 드론활용 센터부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홍보관 건립 현장 등이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에서는 10월 개관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운영 조례와 관련 규정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으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현장에서는 사업에 걸맞은 콘텐츠와 인터리어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두 현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함을 지적했다.

월라동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현장에서는 공유재산 변경 의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이전으로 인해 타 시설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방문 현장은 복합형 공공도서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다목적 드론활용 센터부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보존·관리와 홍보관 건립 현장 등이었다. 복합형 공공도서관에서는 10월 개관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운영 조례와 관련 규정의 시급한 정비를 주문했으며,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현장에서는 사업에 걸맞은 콘텐츠와 인터리어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고, 특히 두 현장은 주차 공간이 협소함을 지적했다.

월라동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건립 현장에서는 공유재산 변경 의결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이전으로 인해 타 시설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킴